

 <b>광천도시공사</b>	<h1>G-브리프</h1>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
주관 부서	미래전략실	발간 일자	2025 11. 20.(목)

##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 분석

김 다 정, 신 지 인

<div> <div>◆ 주요 내용 ◆</div> <div> <div>○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 개요</div> <div>- 5개 국정목표·23개 추진전략·123개 국정과제로 향후 5년 국정운영 로드맵 제시</div> <div>○ 핵심 방향</div> <div>- AI 3대 강국 도약 및 전 분야 AI 활용 확대</div> <div>- 자치분권·균형성장, 주거·일자리·생활SOC 확충</div> <div>- 재난·산업안전 대응체계 고도화 및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div> <div>- 노동시간·정년 등 노동제도 개편 및 복지·보건의료 체계 혁신</div> <div>○ 정책적 시사점</div> <div>- AI 기반 도시·시설 운영 및 스마트 안전·복지 서비스 고도화</div> <div>- 3기 신도시, 고령친화 주거·생활SOC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사업전략 필요</div> <div>- 바이오·기후테크 등 지역 신산업과 연계한 공사 역할 확대</div> </div> </div>		
<div> <div>1. 국정과제 체계도 ..... 2</div> <div>2. 종합분석 ..... 3</div> <div>3. 분야별 분석 ..... 3</div> </div>		

## 1

## 국정과제 체계도

○ 정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 확정(2025. 9월)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국정목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분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추진전략	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1. AI 3대 강국 도약 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5. 성장을 복돋는 금융혁신	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3.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4.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8.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1.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2.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3. 세계로 향하는 실용 외교
국정과제	19개 과제	29개 과제	23개 과제	37개 과제	15개 과제

## 2

## 종합분석

### ① [추진력] 빠른 정책 추진 기조에 대응한 선제적 준비 필요

- 다수의 국정과제가 ‘설계보다는 실행’에 초점을 두고 추진
- 국가정책의 변화 속도에 발맞춰 신속 대응을 위한 정책기획·의사결정 체계 강화 필요
- 국정과제별 세부 이행일정에 맞춰 지방공기업 차원의 조기 대응 로드맵 마련 필요

### ② [기술·안전·복지] AI 기반 도시 운영과 생활안전·복지 중심 혁신 요구

- ‘AI’와 ‘안전’을 전 분야의 핵심 가치로 제시, 공공기관의 필수 대응과제로 부상
- AI 행정, 스마트 안전관리, 맞춤형 복지 등 기술 기반의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혁신 필요
- 공사는 시설운영 특성을 활용해 AI 기반 시설관리,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생활 SOC 품질 강화 등의 사업 방향 설정 필요

### ③ [자치·책임] 지방이 스스로 책임지는 분권형 성장 모델 강화

- 자치분권·균형성장 기조 확대에 지방정부의 자주성·책임성이 강조되는 정책 환경 조성
- 과천은 자주재원 확대, 시민참여 강화, 책임행정 실현 등을 통해 신뢰 기반의 지역 정부 모델로 발전 가능
-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추진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기반한 작지만 경쟁력 있는 도시 운영 모델 구축 여지 확대
- 시민참여 확대 흐름에 맞춰 수요 기반 서비스 설계와 환류 체계 강화 필요

## 3

## 분야별 분석

- ✓ 본 장은 5대 국정목표 중 공사 업무와 직접적 연계성이 낮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제외한 4개 국정목표를 대상으로 분석 진행
- ✓ 공사의 역할·사업 구조와 관련성이 높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시사점 도출

##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 주요내용

#### ①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 복합 민원 원스톱 처리, 신속·실질적 민원 해결, 개인 맞춤형 추천
- 주민 참여 강화(주민참여리빙랩, 주민 발굴 문제 지역사회 함께 해결 등)

#### ② 책임감 있는 행정

- 공직자 윤리 강화,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공공기관 보유 자원 활용, ESG 경영 강화, 적극 행정 활성화

#### ③ 유능하게 문제 해결

- 공공부문 AI 적극 도입 → 업무 방식 혁신, 민원 처리 개선 등 효율화
- 공공데이터 개방, 재정 운영 효율성 향상, 능력 중심 인사제도 운영

### 세부 국정과제

국정과제	주요내용
<b>국정13</b>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 공직 내 AI 인재 육성 등 전문성·직무 중심의 인사체계 마련 · 주식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및 부동산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등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 저연차 실무직·현장공무원 처우개선, 신규공무원 보직 전 기본교육 강화 및 육아친화적 공직여건 조성 * 공무원 7~9급 보수 인상,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b>국정14</b>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 공공서비스 이용자격, 신청방법 등을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통해 선제적·통합적 제공 · 주민참여 리빙랩 추진, 주민 발굴 문제 지역사회 함께 해결 · 운영성과(회의록, 예산집행, 운영실적 등) 공개·점검 ·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록물 서비스 개선
<b>국정17</b>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계획 실적 차이 등 충실한 분석으로 평가·분석 보고서 내실화 · 지방자치·교육자치 행정재정 효율성 향상 방안 마련
<b>국정18</b> 공공기관 경영 혁신	· 보유 자원 적극 활용, 공공기관 ESG경영 공통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기관장 경영성과평가 실시, 임기 규정 개정 · 유형별 지표·배점·평기주기 개선 등 맞춤형 경영평가로 성과·역량 제고 · 지방공공기관, 지역균형 성장과 국가현안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 확대 등 자율적 구조개혁 추진

## 정책적 시사점

### ① [공공부문+AI] 공공서비스 혁신과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

- AI 기반 정책결정 지원 시스템 단계적 도입 추진(시민맞춤형 행정 플랫폼)
- AI 핵심 학습 데이터, 보유 데이터 품질 점검·표준화·연계 등 체계적 관리
- 개인정보보호, 윤리적 판단 기준 등 제도적 가이드라인 함께 마련

### ② [투명성 강화] 주민 참여·정보공개를 통한 신뢰기반 행정 구축

- 공공사업 비중 大, 정책 과정 내 주민·전문가·이해관계자 함께 참여
- 보유자원, 시설정보, 사업성과 개방형 플랫폼 공개, 시민이 직접 평가·제안
- 단순한 공개 아닌, 시민에게 설명하고 의견 반영하는 순환체계 구축 중요

##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주요내용

#### ① 신성장동력(ABCDE)

- 산업AI / 바이오 / 컬러 / 방산·항공·드론 / 기후테크
- AI 시티: 거주하며 AI 민간·공공서비스 발굴 및 실증 테스트

#### ②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 R&D 강화, 혁신성장 지원, 관련 기업 육성, 규제 제로화

## 세부 국정과제

국정과제	주요내용
<b>국정20</b> AI 고속도로 구축	· 국가 전체 공공·민간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 플랫폼, 분야별 데이터 스페이스, AI 가독성 확보를 위한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등
<b>국정24</b> AI 민주정부 실현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전 공무원 AI 역량 강화 및 인재양성 · 수요 많은 공공데이터 중심으로 역점 개방 및 공유 확대 · AI 윤리 내재화, AI 영향평가 도입, AI 활용 서비스 현황 공개 등 공공부문 AI 활용 안전성·신뢰성 확보
<b>국정25</b>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속·엄정 대응 · 개인정보 평가·인증 고도화 등 사전예방 보호조치 확대

국정과제	주요내용
<b>국정31</b>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하며 실증하는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확산</li> <li>· 도시 각 분야의 AI 민간·공공서비스 발굴 및 실증 테스트</li> <li>· 디지털 트윈 국토, AI 건축·에너지 등 도시서비스 제공</li> </ul>
<b>국정40</b>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 탈탄소 전환 위한 향후 5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li> <li>· 지역 기후테크 기업 집중 지원,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li> </ul>
<b>국정41</b>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로에너지 건축물·그린리모델링 확대, 국산목재 활용 시범사업 추진 및 녹색건축인증 개편 등 제도개선</li> <li>* 공공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li> </ul>
<b>국정43</b>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열섬 완화 숲, 생활정원 확충 등 녹색공간 조성, ESG 경영 등과 연계한 민간 참여 자연환경 복원사업 추진</li> <li>· 기후 감시·예측부터 기후위험 영향까지 적응 정보통합플랫폼 구축</li> </ul>
<b>국정44</b>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수송, 생활 등 전 분야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li> </ul>
<b>국정46</b>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벤처·중소기업의 성장(Scale-up)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li> <li>·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 마련, ESG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ESG금융 강화</li> </ul>

## 정책적 시사점

### ① [AI 기반 성장] 지속가능한 스마트 경제도시로의 전환

- AI 경제·산업정책 출발점, 소규모 도시 장점(데이터 밀도 高, 피드백 빠름)
- 과천 AI 기반 실증사업 최적화 도시. 민간기업과 데이터 공유 및 시민 참여형 리빙랩 통해 ‘AI 행정 + AI 시민체감 서비스’ 모델 선도 가능
- AI 시티 실증사업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 기대효과

### ② [제약·바이오 특화도시] R&D 집적과 혁신 생태계 구축

- 지정타 내 제약·바이오 주요 기업 多, 市 도시계획조례 개정 준주거지역 내 연구소 건축 허용 등 산업 맞춤형 지원 추진 중
-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로 바이오·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본격화
- 기존 입주 기업+신규 의료·연구 기능 결합 ‘도심형 제약·바이오 특화도시’로서 직접 경쟁력 강화 필요. 행정적 인센티브 설계 고민

###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주요내용

##### ① 5극 3특 중심 일자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 공공서비스 광역화(공공협약제도), 지역주도 행정체계 개편
- 중소도시 육성(주거·생활SOC 복합공간, 랜드마크), 공공기관 이전
- 지역주도 양질의 일자리 정책 추진

##### ② 자치분권 역량 제고

-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역량·책임성 강화, 주민자치권 확대
- 자주재원 확충(국세:지방세=7:3), 지방의회 심의 내실화, 주민참여 확대

##### ③ 주택공급 확대 및 맞춤형 주거지원

- 공적주택 5년간 110만호 공급, 유희부지 활용 공급, 신도시 주택 조기 공급
- 민간주택 공급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 신혼부부,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

#### [이재명 정부 9.7 부동산 대책 / 공공주도로 수도권 매년 27만가구 공급]

- LH, 민간에 땅 매각 중단. 직접 개발 늘려 공급 '속도'
- 유희용지 복합개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출처: 매일경제(2025.9.7.)

####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 서울 전지역·과천 토허제로 묶는다]

- 서울·경기 12곳 조정대상·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 스트레스DSR 하한선 1.5%→3%, 주담대 한도 차등, LTV 비율 70%→40%

출처: 매일경제(2025.10.15.) / 파이낸셜뉴스(2025.10.15.)

#### 세부 국정과제

국정과제	주요내용
<b>국정53</b>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재정정보 공개 확대로 투명성 증진,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 내실화



국정과제	주요내용
<b>국정57</b>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TX 건설사업 차질 없이 추진</li> <li>· 대도시 내 도시철도 및 BRT·광역버스 확대</li> </ul>
<b>국정62</b> 주택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주택 5년간 110만호 공급,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야 주택 공급</li> <li>·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주택공급, 공공이 적극적으로 복합사업 추진</li> <li>· 3기 신도시 중 조성 중 택지 주택공급 조기화</li> </ul>
<b>국정63</b> 주거복지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복지 서비스 등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li> </ul>

## 정책적 시사점

- ① [지역 맞춤형 정책] 자치역량 강화에 따른 전략적 우선순위 필요
  - 세입 여건 개선 전망(국세-지방세 비율 7:3 수준 상향 추진)에 따른 재원 사용 우선 순위와 전략적 투자계획 수립 필요
  - 중앙정부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 탈피, 주민 참여 기반 맞춤형 정책 추진
- ② [일자리 정책 파급 효과] 자족기능 + 경제활성화 + 정주환경 개선 연계
  - 단순한 고용 확대가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형성 목표
  - 기업 유치로 정주기반 강화,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 지역 내 순환적 경제효과 극대화
- ③ [3기 신도시] 공공주도 공급 확대 기조에 따른 대응 필요성
  - 공급 가속화에 대비한 재정·관리 부담에 대한 사전 분석 및 대응체계 마련 필요
  - 높은 공급 압력 속 과천의 공공주택 공급 속도와 기반 시설 확보 간 균형이 핵심 과제
- ④ [공공주택 공급체계 변화 대응] 지방공기업의 직접 공급역량 검토
  - 정부가 LH에 공동주택용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건설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 공급체계를 전환하는 기조 확인
  - 공급 지연 해소와 공급 속도 제고 중심의 공공주택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공기업도 직접 주택공급·시설조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 검토 필요
- ⑤ [인구구조 변화 반영]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강화 필요
  - 고령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과천의 특성을 고려한 고령자 친화형 주거정책 마련 필수
    - 다만 사업성 한계로 민간 참여가 낮아, AIP(Aging in Place) 관점에서 민간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 설계가 핵심 과제
  - 1인 가구와 청년층 비중이 낮은 과천의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주거·생활환경 조성 필요
    -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직주근접 주거공간, 역세권 중심 개발, 지역 상생 복합개발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 전략 마련이 요구됨



##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주요내용

#### ① [안전]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 실효적 산재 예방,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사망사고 감축 목표
- 재난관리 역량·대응체계·모니터링 강화로 재난 피해 최소화

#### ② [복지] 인구 위기 해소

-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 퇴직연금 강화
- 문화예술관람률 70% 목표, 일상 속 문화 향유·참여 기회 확대
- 생활체육 활성화 국민 참여율 65% 목표, 모든 지역 균등한 스포츠 기회

#### ③ [노동] 존중받는 일터 구현

- 중앙·지방정부 주 4.5일 지원 시범 사업 실시

국정과제	주요내용
<b>국정72</b>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부서 우수인력 배치 및 조직 강화</li> <li>· 건축물 화재 예방, 건설공사 전 과정 안전대책 마련 등</li> </ul>
<b>국정73</b> 재난 피해 최소화 위한 예방·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기반 지능형 관제(CCTV) 고도화, 인파·침수·산불 등 특정재난 예측모델 선도개발, 재난 드론 활성화, 예·경보 통합플랫폼 구축</li> <li>· AI기반 홍수예보 확대, 도시침수 예보지역 및 침수대응 인프라 확충</li> </ul>
<b>국정75</b>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li> <li>·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등</li> <li>· 위험성평가 개선(차별조항 신설,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재해 조사의견서 공개 등</li> <li>· 작업중지권한 강화(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 신설)</li> <li>· 업무상 재해 판단 명문화,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li> </ul>
<b>국정79</b> 장애인 기본적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29년 기준, 민간 3.5%, 공공 4.0%)</li> </ul>
<b>국정83</b>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병원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역량 갖춘 병원 육성 및 1:23차 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li> <li>* 필수의료 분야 24시간 진료 유지 종합병원 육성 등</li> </ul>
<b>국정84</b>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중별 기능 명확화 및 역할에 따른 차등 보상,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li> </ul>

## 세부 국정과제

국정과제	주요내용
<b>국정91</b>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 AI·IoT 기술 활용 스마트돌봄서비스 확충 및 고령친화사업 활성화
<b>국정92</b>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등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 법정 정년단계적 연장 입법 및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b>국정95</b>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노사 자율 확산 촉진·지원, 주45일제 추진 · 연차휴가 개선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난임 유급휴가 확대
<b>국정97</b>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조치 및 폭력예방교육 개편 추진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 임금 실태 체계적·종합적 공개
<b>국정106</b>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전 국민 대상 스포츠 참여 포인트 제공, 국민체육센터 확충

## 정책적 시사점

### ① [안전한 도시 구현] 산업재해 예방 및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정부 핵심 기조가 ‘AI’와 ‘안전’으로 이동함에 따라, 도시개발 과정 전반에서의 안전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
- 공공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강화가 예상되며, 공공 차원의 산업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AI·CCTV 기반 기술적 예방 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재난관리 역량 강화 요구의 상시화,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실증사업의 도시 전체 확장 방안 고려

### ② [공공부문 인력·근무체계 변화 대응] 조직 운영체계 정비

-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에 대비한 사회적 약자 채용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정년 단계적 연장과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직접적 영향 불가피
- 근로시간 단축은 공공서비스 연속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AI 행정자동화·탄력 근무제 등 업무 효율 제고 방안의 사전 검토가 필수

### ③ [향유 기회 확대] 일상 기반의 문화·체육 활동 강화

- 취약계층을 포함한 균등한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정책 설계가 핵심 과제
-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하여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충 추진 필요

## ■ 참고자료

### [인터넷 자료]

- 국무조정실. (2025. 9. 16.). [보도자료]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보도자료. Retrieved from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20750>
- 이희수, 김정환. (2025. 9. 7.). 공공주도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 공급. 매일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news/realstate/11413271>
- 위지혜. (2025. 10. 15.). 서울 전지역·분당·과천·하남까지 모두 토허제로 묶는다 [10·15 부동산대책]. 매일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news/realstate/11441698>
- 장인서. (2025. 10. 15.). 서울+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3중규제로 묶는다 [10·15 부동산 대책]. 파이낸셜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fnnews.com/news/202510150753317335>

‘G-브리프’의 내용은  
과천도시공사 미래전략실의  
자체 분석 결과입니다.